더불어민주당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 토론회

공 동 주 최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국회기후위기그린뉴딜연구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양이원영

목 차

발 제

좌장 임성진 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2050탄소중립 이행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역할 2
국회의원 양이원영

독일 에너지전환의 쟁점과 해결과정 :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13
염광희 박사

토 론

국내 에너지전환의 주요쟁점 및 현안 26
선정수 뉴스톱 기자

지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에너지전환 34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청년이 바라보는 기후위기와 탈석탄 37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노동배제 없는 정의로운 전환 42
송민 남부발전 노조위원장

2050탄소중립 이행에서 에너지전환지원법의 역할

국회의원 양이원영

제21대 국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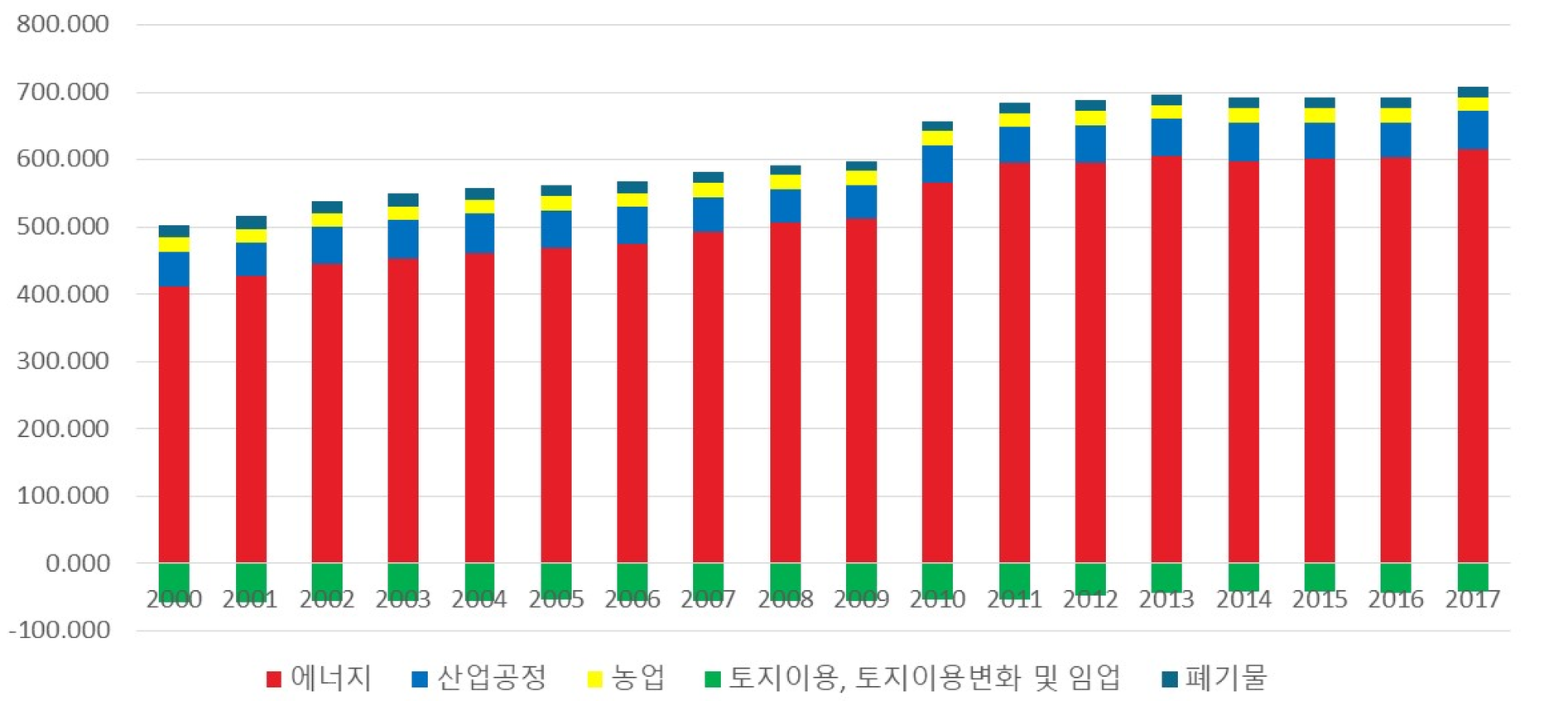
에너지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회의원 양이원영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온실가스는 어디서 나오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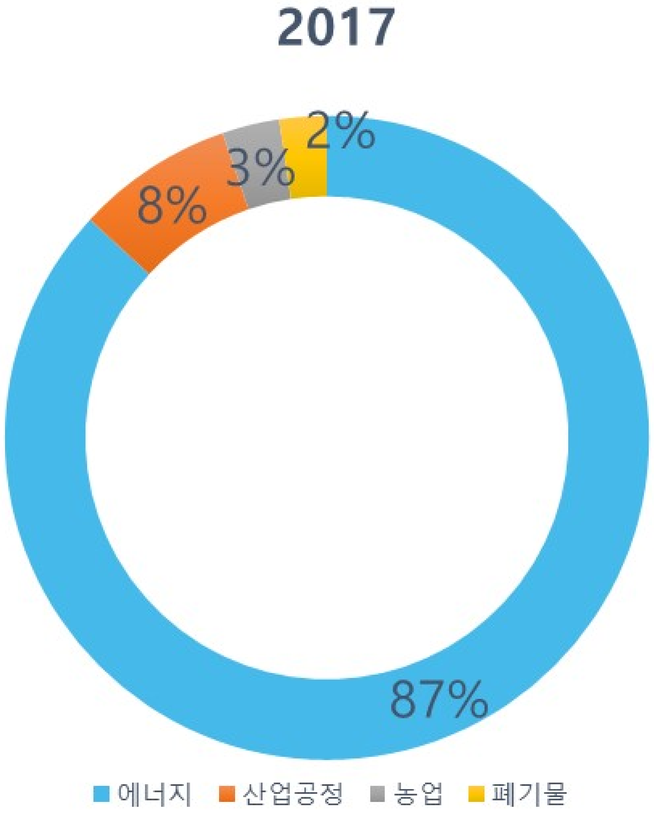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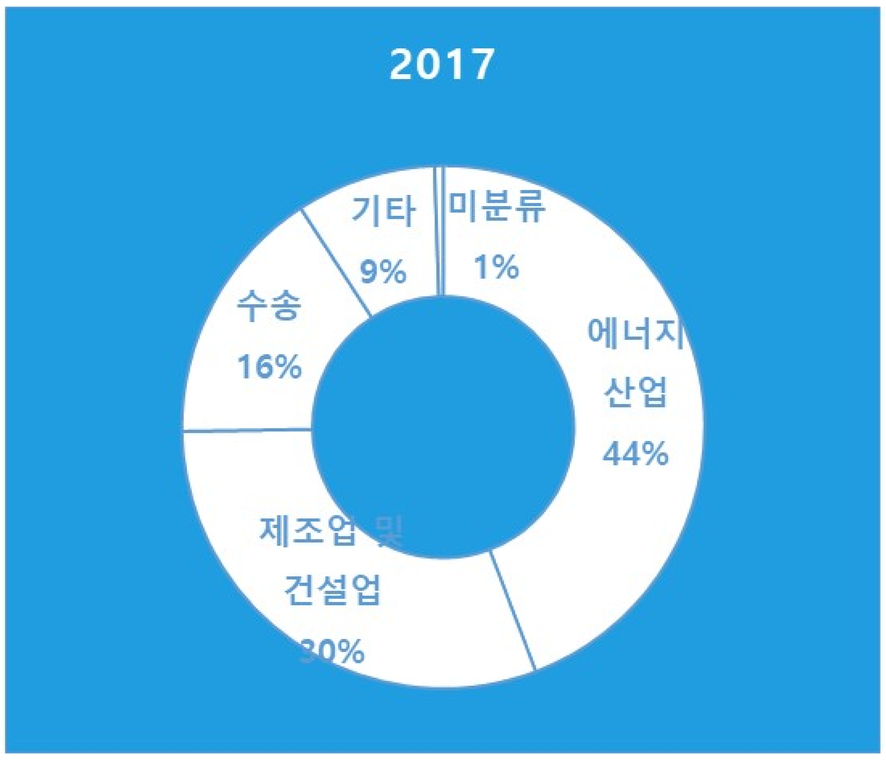


국가 온실가스 배출통계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6&tblId=DT_106N_99_2800020

온실가스배출원 87% : 에너지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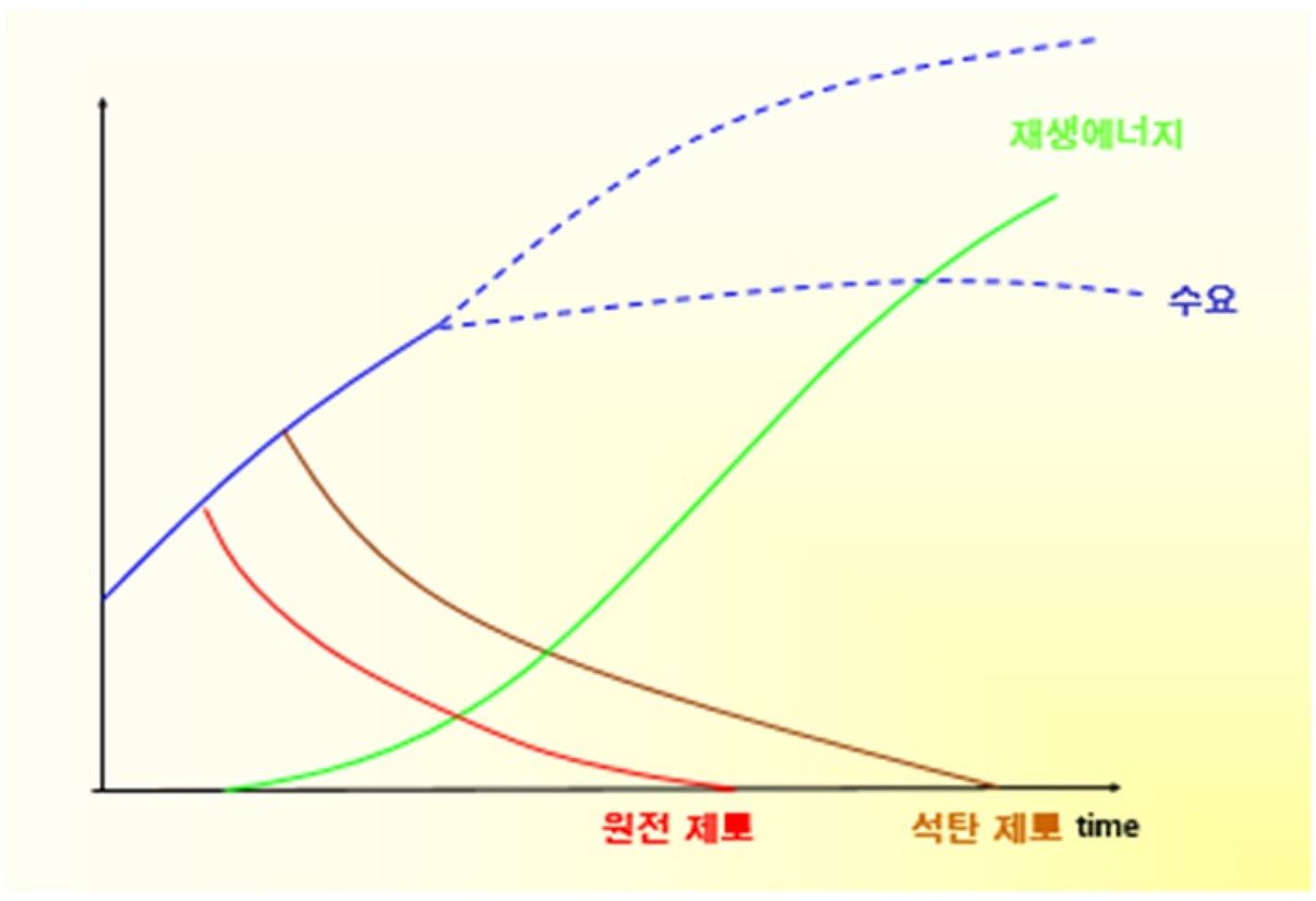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에너지 전환 경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독일 : 2022년 원전제로, 2038년 석탄제로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REUTERS Business Markets World UK TV More

WORLD NEWS SEPTEMBER 6, 2019 / 1:44 AM / 11 DAYS AGO

Germany to start closing black coal plants in 2020 - draft la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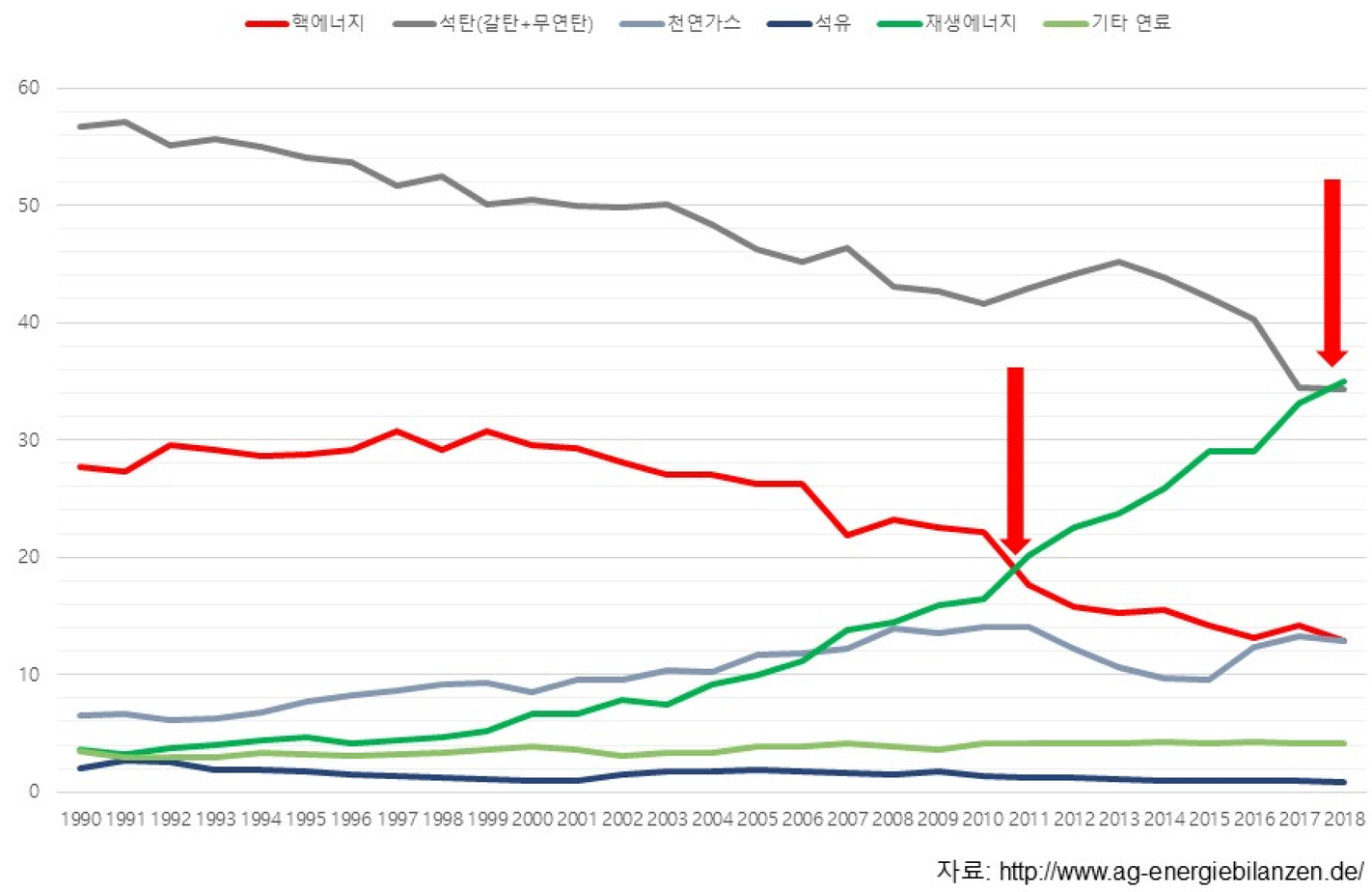
Markus Wacket 2 MIN READ

BERLIN (Reuters) - Germany plans to shut down its first power plants that use black coal in 2020, a draft law seen by Reuters on Thursday showed, as part of a planned phase-out of coal by 2038 expected to cost at least 40 billion euros ($44 billion).

- 독일정부가 2038년까지 탈석탄을 달성하기 위한 법안 마련
- 2020년부터 흑탄(무연탄)발전소를 폐쇄 시작 2022년까지 12기 폐쇄
- 2038년까지 탈석탄을 위해 최소 400억유로(440억달러, 약 45조원) 소요

독일 재생에너지, 원전과 석탄발전량 추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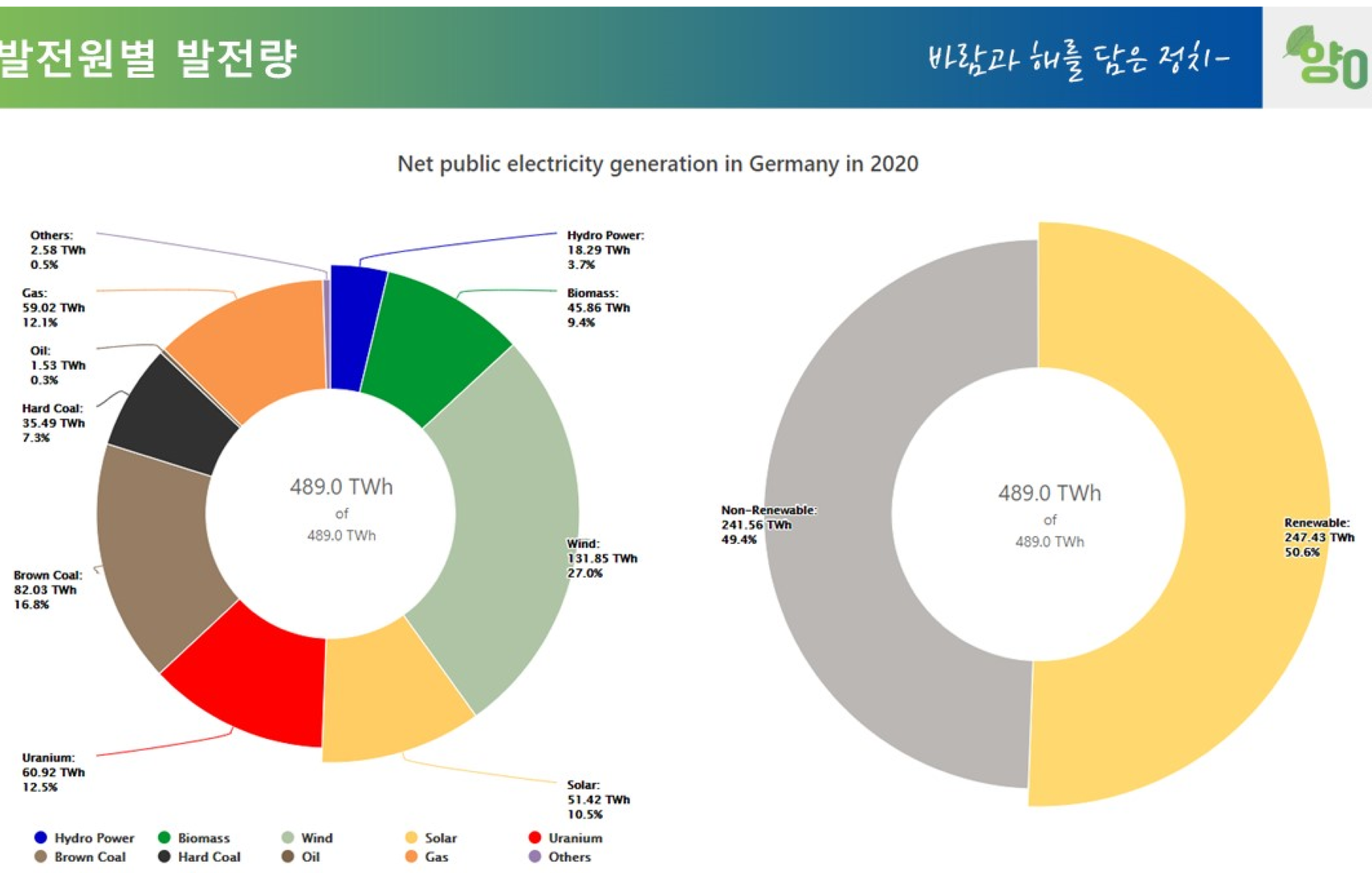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자료: http://www.ag-energiebilanzen.d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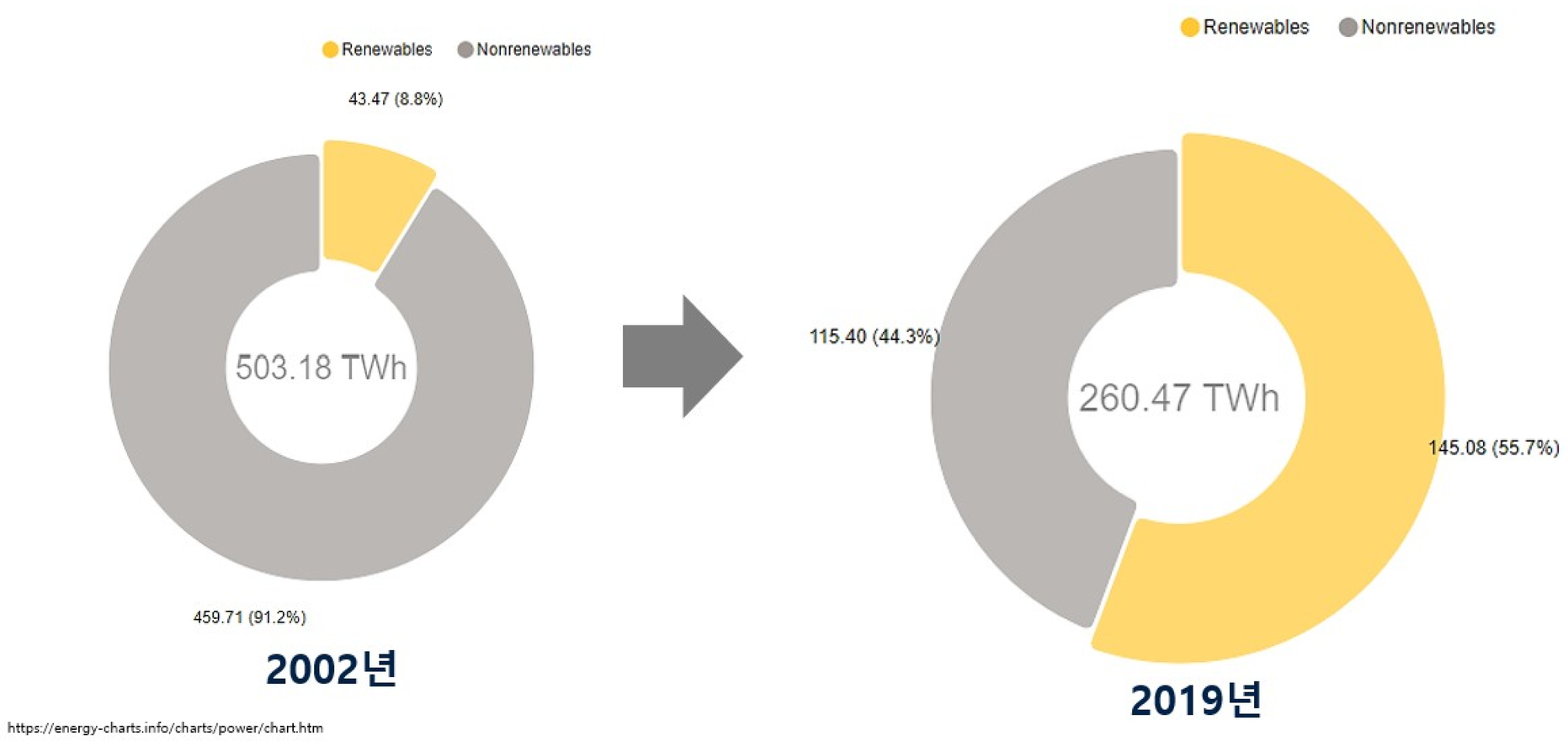
독일 발전원별 발전량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 증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석탄화력발전소 현황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전국 57기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

→ 삼척, 고성, 서천 등
협약을 통해 조기 폐쇄 시 대부분 지역 포함 가능

신규 석탄 건설 현황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발전소	호기	용량 (MW)	연료	계획	예타		전기사업		환평		실시계획		공사계획		준공예정	회사	지역
					신청	인가	신청	인가	신청	인가	신청	인가	신청	인가			
신서천	1	1,000	석탄	6차	-	-	'13.9	'13.9	'14.5	'15.5	'14.9	'15.10	'15.12	'15.12	'21.6	중부	충남
고성하이	2	1,040	석탄	6차	-	-	'13.4	'13.4	'13.12	'15.6	'15.1	'15.10	'16.3	'16.4	'21.10	고성그린	경남
강릉안인	1	1,040	석탄	6차	-	-	'13.4	'13.4	'13.10	'15.6	'14.11	'15.10	'16.2	'16.2	'22.9	강릉에코	강원
	2	1,040	석탄	6차											'23.3		
삼척화력	1	1,050	석탄	6차	-	-	'13.6	'13.7	'15.2	**'17.12**	'15.8	**'18.1**	**'18.1**	**'18.1**	'23.10	삼척블루	강원
	2	1,050	석탄	6차											'24.3		

※ 고성하이 1호기 상업운전 시작('21.5)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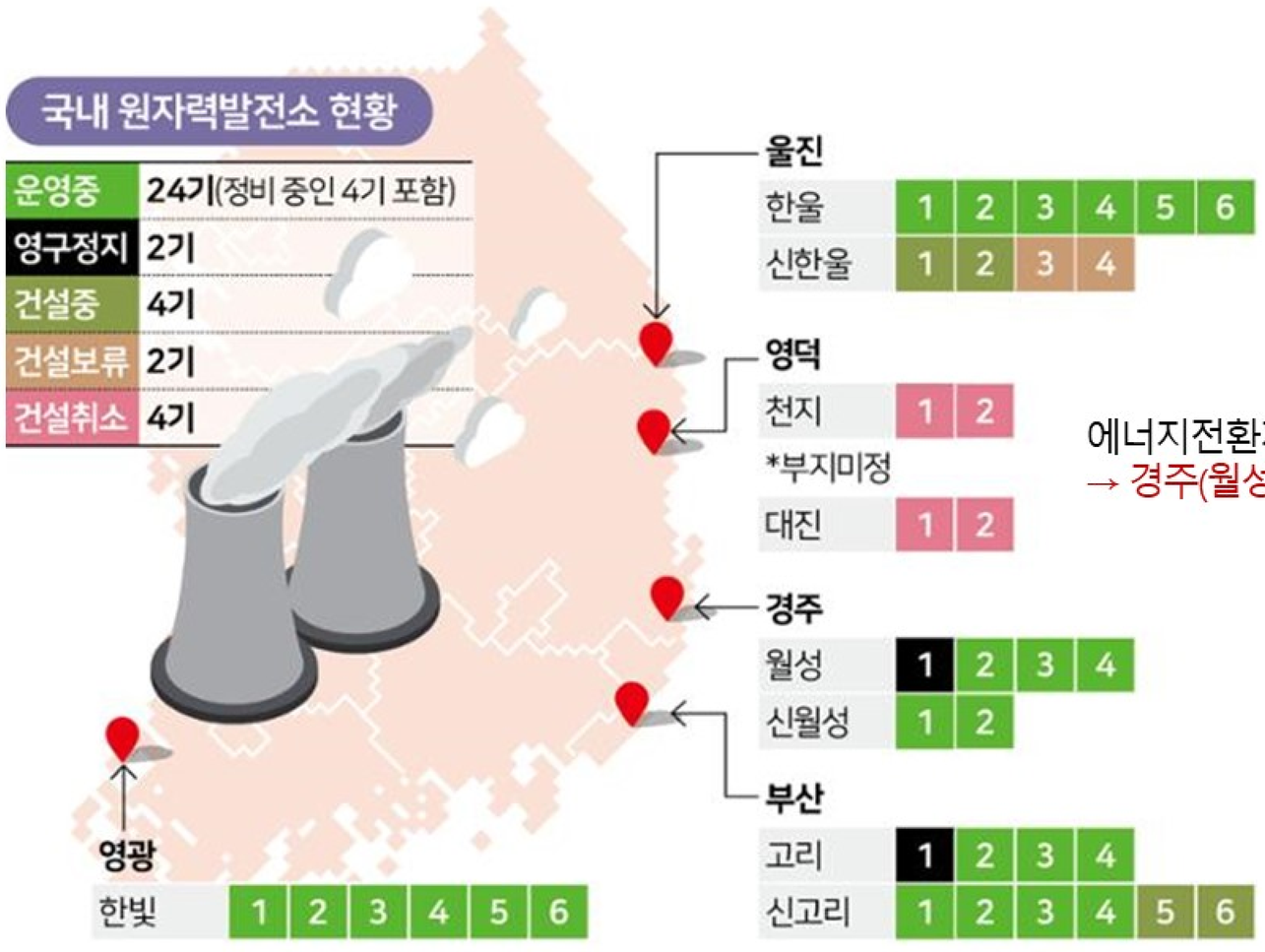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환경영향평가 이행조치 명령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환경영향평가 이행명령	현재상황
<공사중지> 제작장 외의 항만공사 공사중지 (1단계 침식저감 시설 설치 시 까지)	검증위원회 검증시까지 항만공사 중지
<원상복구> 기존 맹반해변에 설치된 불량 양빈* 준설토 즉시 회수하고 맹방해변 모래와 유사한 모래를 활용한 양빈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른 양빈결과를 제출(20.12.31까지) * 해안침식저감·방지를 위해 해변에 인위적으로 모래를 공급하여 넓히는 것	㈜삼척블루파워 : (21. 3. 29) 맹반해변에 양빈된 준설토 회수 완료 및 유사한 모래기준에 따른 양빈계획서 제출
해변에 준설토를 적치하여 해변이 훼손된 바, 기존 적치장을 원상복구하고, 양빈용 모래적치장 설치·운영, 필요시 준설토 적치장은 별도로 설치·운영	기존 적치장 원상복구 및 준설토 적치장 확보 완료 (발전부지 내 태양광 부지, 삼척시 교과리에 인허가 진행 중)
	현장 확인 결과 양빈 모래가 불량하고 기존에 양빈된 모래도 수거하지 않음
	《 환경영향평가법 》 제7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4조제4항 또는 제40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 또는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이행조치> 1단계 침식저감시설* 조속한 설치(20.12.31 까지) * L형돌제 1기, 곡면 방사제, 진입부 1기, Y형이안제 1기, 중앙돌제 1기	• 1단계 침식저감시설 완료기한 연장 신청(21.1.10 까지) • 1단계 침식저감시설 연장 재요청(21.3.31 까지) / 이행조치 명령 미이행 과태료 2천만원 부과 • ㈜ 삼척블루 파워 1단계침식저감시설 설치 완료 보고(21.3.5) *** 침식저감시설 효과 및 부실시공 관련 검증위원회 검증 중**

원자력발전소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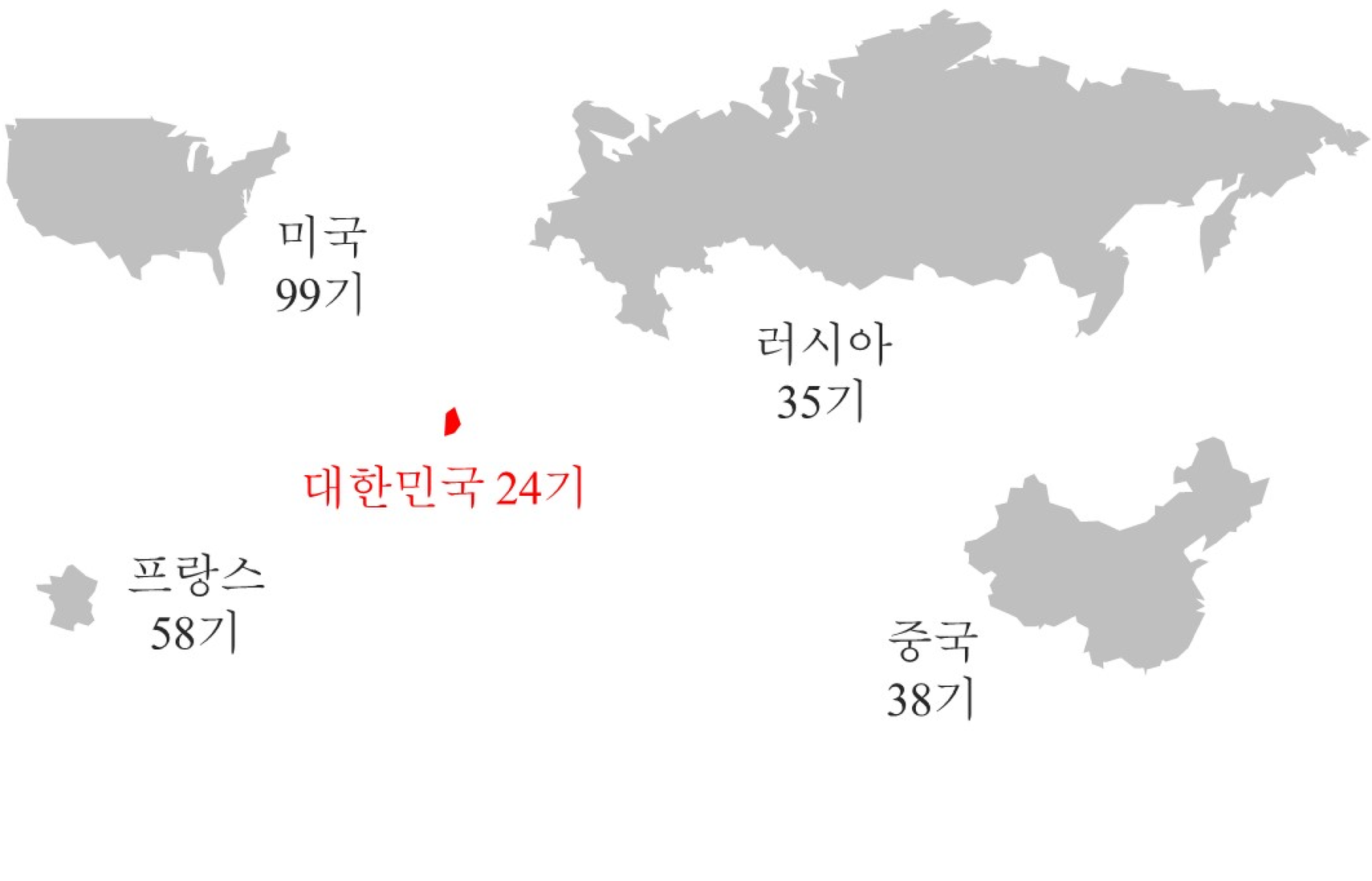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지원법으로 지원 가능 예상 지역
→ 경주(월성1호기), 영덕, 울진(신한울3,4호기) 등

세계 1위 원전 밀집도, 대한민국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에너지전환지원법이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을 목적으로 한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

▶기후위기 대응과 2050탄소배출 제로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확대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사업자, 지역, 주민, 노동자 등이 배제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확립

지원 심의, 의결은 누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시행 주체 : 제3조, 제4조(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제5조(비용심사전문위원회)
제17조(조정위원회)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 발전사업 변경, 철회 등 협약을 통해 지원 여부 및 대상, 금액 결정 / 위원장(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비용심사전문위원회 : 비용지원 및 지원금액 산정 등

▶조정위원회 : 분쟁 조정

→ 최종 국무회의 의결로 결정 짓도록 하는 방안 논의 중

지원 대상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제6조 ~ 제10조(발전사업자)
제11조, 제12조(연관산업 및 주변지역)

▶발전사업자 : 발전사업 변경, 취소 또는 철회 등 협약 시 해당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지출한 비용 지원(부지매입비, 공사비, 용역비, 인건비 등)

▶연관산업 : 재생에너지 등으로 산업전환 지원, 노동자 재취업, 전업지원금 등 지원
산업관련 연구기관 및 연구소, 대학 등 지원

▶주변지역 :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등 지원

공공이익과 지정 철회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제10조(지정등의 철회)

▶에너지전환을 위해 불가피하고 공공이익을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발전사업자가 동의하지 않을 때 지정 철회 가능

→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해 의결

▶지정 철회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발전사업자에게 비용 지원

→ 지정 철회 관련 우려들은 상임위에서 추가 논의

재원 마련은?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제14조, 제15조(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

제16조(에너지전환지원기금)

▶에너지전환지원부담금 : 원전 및 석탄발전 사업자 부담 원칙(킬로와트시간당 2원을 곱한 금액 이하)

→ 발전사업자 부담 관련 우려는 추가 논의

▶에너지전환지원기금 : 부담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수익금, 기금 운용 수익금, 그밖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 전입금 등

→ 탈탄소 이행 기본법 상 「기후위기대응기금」으로 통합 논의

적용은 언제부터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부칙 제2조(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에너지전환지원법은 2017년 10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에너지정책의 이행을 위한 사항부터 적용하며,

▶이 법 시행 전 에너지전환의 이행을 위해 발전사업을 변경하거나 취소 또는 철회한 발전사업자에게는 발전사업 변경등 협약 체결을 아니한 경우에도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

공정한 에너지전환

바람과 해를 담은 정치- 국회의원 양이원영

기후위기에 대응한 2050탄소배출 중립

그린뉴딜의 성공과 국민경제의 미래 먹거리

국민 누구도 배제 없는 공정한 에너지전환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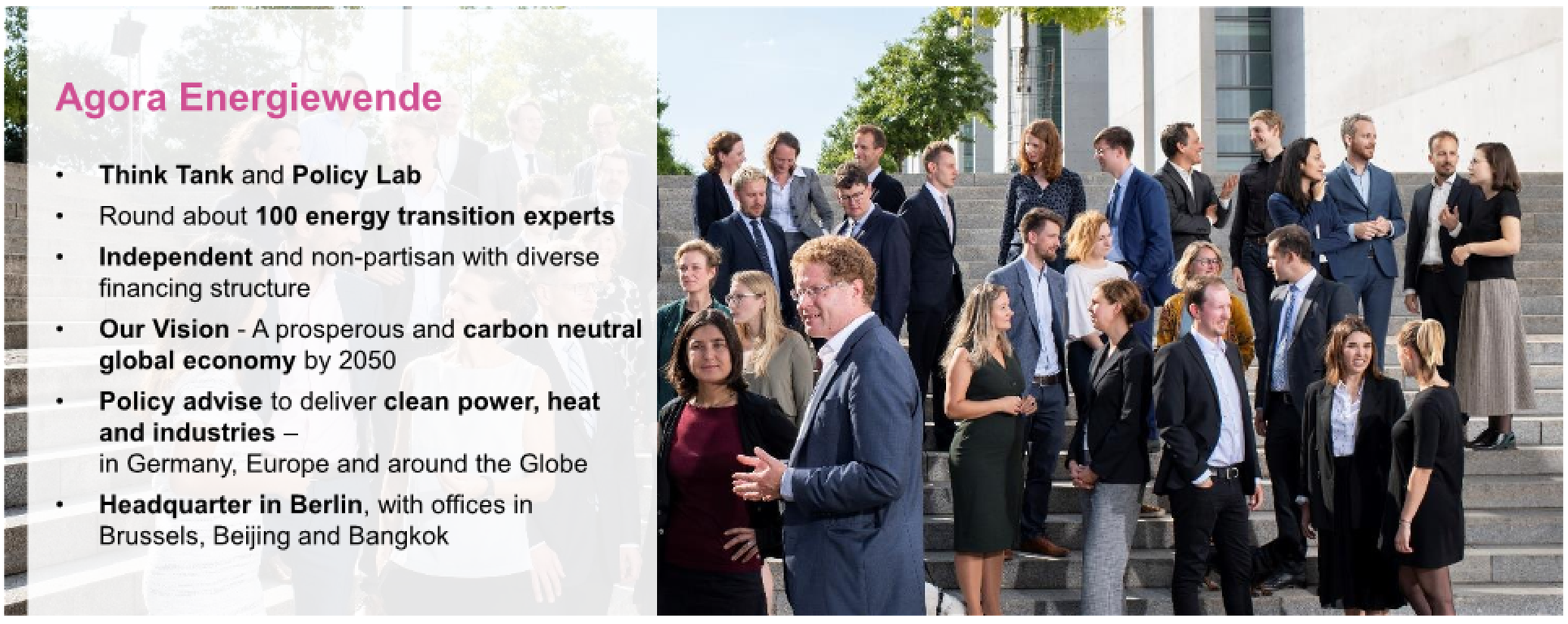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의 책무입니다.

독일 에너지전환의 쟁점과 해결과정 :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염광희 박사

Agora Energiewende

Agora Energiewende



Our global partners: The International Network of Energy Transition Think Tanks

The role of Agora in policy debates

에너지전환(탈핵)의 필요성 대두

→ 조직적 시민운동과 녹색당 창당

- 서독정부의 원전 보급 확대에 지역 주민들이 저항: `75년 Wyhl 지역의 반대 운동(독일 신사회운동의 효시, Engels, 2003), `76~`77년 Brokdorf 발전소 반대(5만명 참여, `81년 유예 결정), `77년 Kalkar 고속증식로 반대(5만명), `79년 Gorleben 핵폐기장 건설 반대(10만명), `79년 반핵집회(Bonn, 15만명), `80년 Gorleben 지역 집단 점거(5,000명), 등등
- `80년 녹색당 창당: `83년 연방 선거에서 5.6% 득표로 27명 연방 하원 진출
- `80년 Ökoinsitut “Energiewende – Wachstum und Wohlstand ohne Erdöl und Uran“ 출간

→ 체르노빌 사고(`86년)

- Bayern: Cs-137 7,400Bq/m² 피폭. `02년 야생 멧돼지, 버섯 등에서 최대 2만 Bq/kg 검출(BfS, 2003)
- `87년 봄 서독 지역에서 수백 건의 사산 보고, 베를린 등에서 다운증후군 출산 급증(BUND, 2006)
- ‘국민의 80% 이상이 원전 반대’

6

제도화된 에너지전환

→ '탈핵 정부' 출현
- `98년 연방 선거 결과, 사민당(40.9%)과 녹색당(6.7%) 연합정부 구성

  # 연정 합의서 4장 '생태적 근대화' 4-3. 근대적 에너지정책, 4-3-2 원전 폐쇄

→ `00년 원자력합의(Atomkonsens)와 `02년 원자력법 개정
- 독일 연방정부와 4개 원전사업자 간 원전 운영 및 폐쇄에 관한 협상(`00.6.14~`01.6.11)
- `02년 원자력법 개정: 원전 신규 건설 금지, 기존 원전 운전 시간 제한(수명을 32년으로 간주)
- `21~`22년 독일 내 모든 핵발전소 폐쇄 예정

→ `00년 재생에너지법(EEG) 제정
- `95년 Aachen시 태양광 기준가격 보장제도 첫 시행, 이후 Nürnberg, Bonn 등 40개 지자체로 확대
- `00년 법 제정으로 독일 전역에 적용: 태양광 99 Pf/kWh, 풍력 12.1~17.8 Pf/kWh 우선 구매

원자력법 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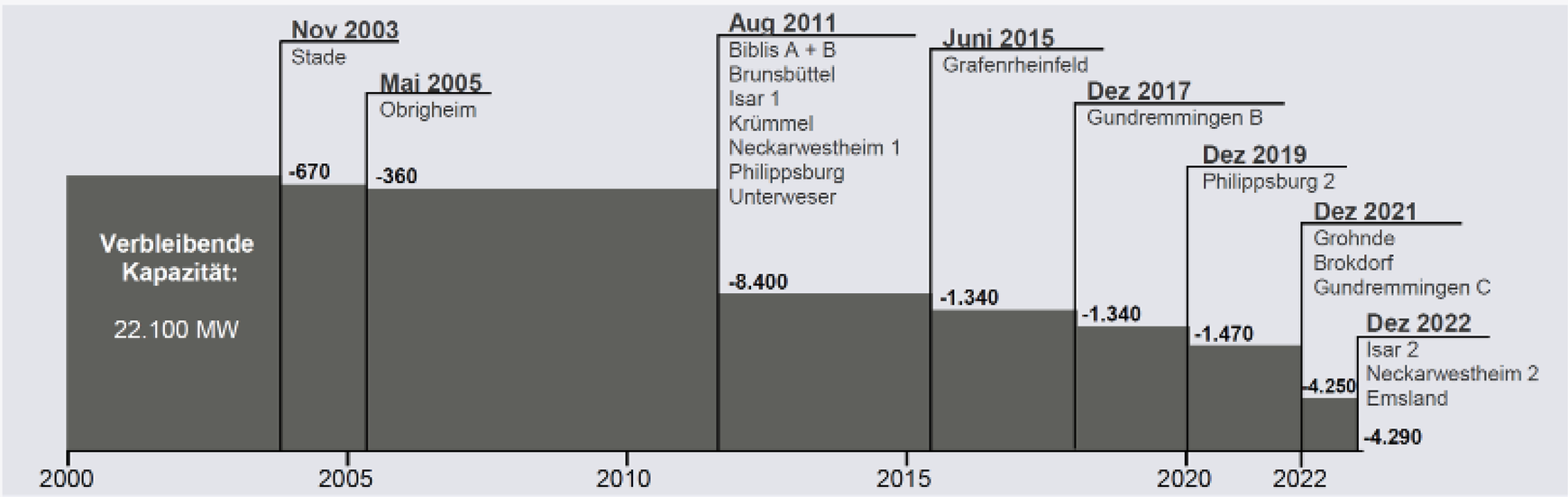
→ 메르켈 2기(`09~`13): 원전 수명 연장 결정(제11차 원자력법 개정, `10.12.8)
- `02년 개정된 '1차 원전 폐쇄' 결정 일부 수정: `80년 이전에 건설된 발전소는 8년 수명 연장, `80년 이후에 건설된 발전소는 14년 수명 연장

→ 후쿠시마 사고 발생(`11.3.11)과 원전 수명 연장 결정 철회(`11.7.31)
- `80년 이전 건설된 7기 및 Krümmel 발전소 등 8기 즉각 폐쇄
- `80년 이후 건설된 9기는 법에 명시된 해까지만 운전하고 폐쇄(법, 7조 1a항)

원전 폐쇄 로드맵

→ 후쿠시마 사고 이후 현재까지 11기 원전 폐쇄

→ `21년 3기, `22년 마지막 3기 폐쇄 계획



Agora, 2021a

원전 사업자의 헌법 소원

→ 제11차 원자력법 개정 이후 원전 수명 연장을 위해 투자를 단행한 4개 원전 사업자가 후쿠시마 사고 직후 수명 연장 결정을 번복한 제13차 원자력법 개정에 대해 헌법 소원

- 재산권 침해, 공용개입(수용)에 따른 보상 규정 부재

→ 독일 헌재, 제13차 원자력법은 '전반적으로 기본법에 합치(weitgehend im Einklang mit dem Grundgesetz)', 그러나 보상/보전 규정 마련 필요하다고 판결(`16.12.6, BVerfG, 2016)

- 원전 폐쇄 가속화 조항은 수용이 아님: 재산 박탈이 전제된 경우만 수용에 해당(기본법 14조 3항)
- 전력회사의 주장 일부 인용
  - `02년 할당되었으나 `11년 개정에서 삭제된 발전량에 대한 정부 보상 필요
  - `10년 개정 이후 전력회사가 투자한 사항에 대한 보전 대책 명시 필요

에너지전환(탈석탄)의 필요성 대두

→ 석탄발전을 이용하는 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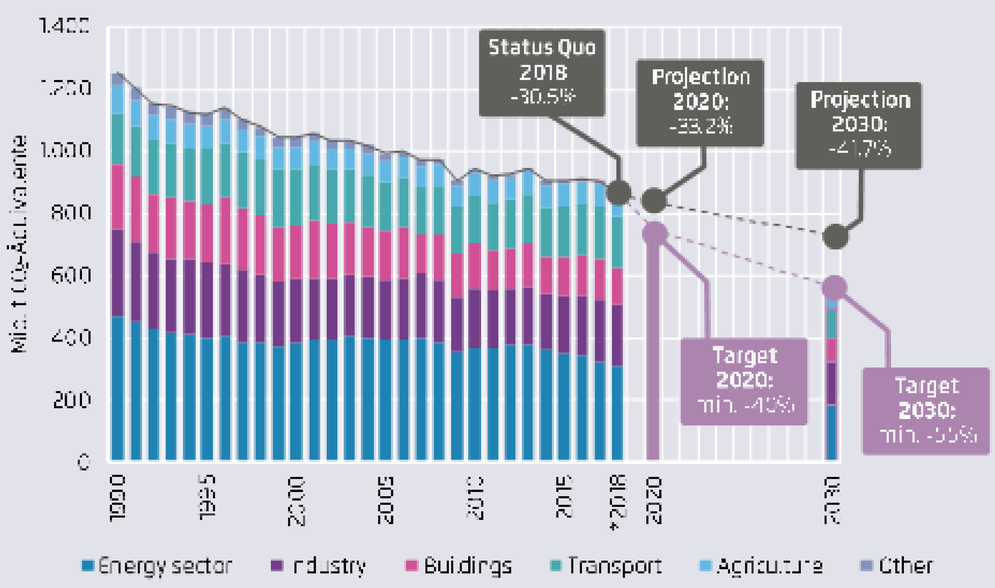
- `18년 독일 전체 온실가스 배출의 1/3은 석탄발전 때문
- `10년 이후로 시민사회단체, 환경단체, 기후 과학자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석탄 발전량 감축, △장기적으로는 석탄발전의 조속한 폐쇄, △추가적인 조치로는 국가/지역차원의 추가적인 온실가스 가격제, 온실가스 배출 제한, 석탄발전의 연간 배출예산 설정 등을 지속적으로 주장

→ 탄광 지역의 신속한 전환을 지원할 필요

- `18년 현재, 약 32,800명이 갈탄/석탄 산업에 종사(독일 전체 고용보험의 0.1% 차지), 간접 고용까지 포함할 경우 약 88,000명 종사(Agora, 2020)
- `18년 현재 석탄화력의 총부가가치는 59억 유로(독일 전체의 0.2% 차지)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 추이 및 전망



BMU (2019), Umweltbundesamt (2019) *preliminary dat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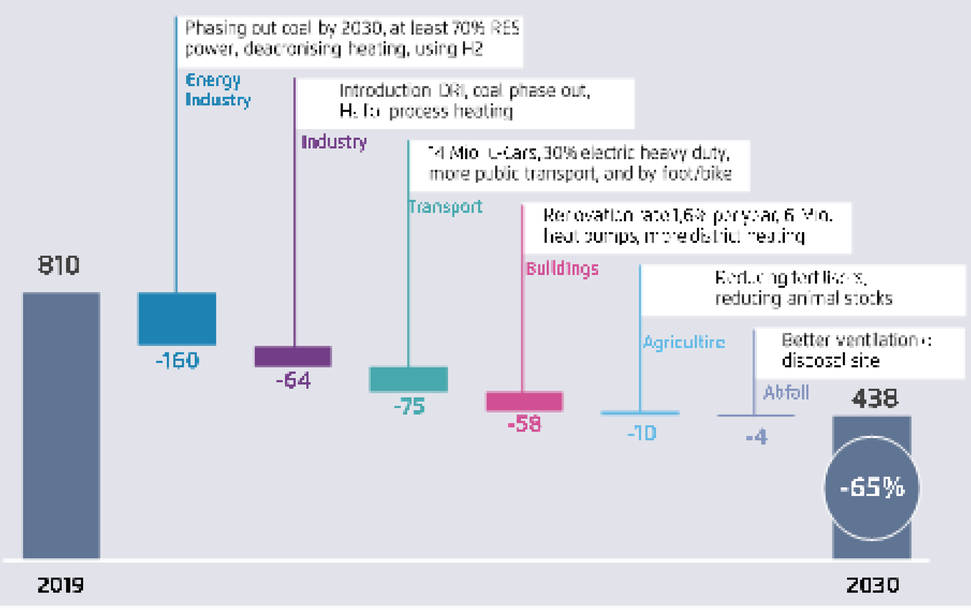
→ `90년 대비 40.8% 온실가스 감축

- `2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90년 대비 40% 감축, 749백만톤 배출) 초과 달성
- `20년 코로나 영향으로 전년 대비 최고 감축 실적: 에너지/수송 부문의 감축 기여 상당
- ETS 온실가스 가격의 고공행진, 천연가스 가격 하락 등도 기여

→ 석탄화력이 전체 온실가스의 1/3 차지: 석탄화력을 유지한 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불가능

독일의 2030년 목표 상향

Measures to reach the recently adopted -65% until 2030



Agora (2021b)

→ 독일 헌재 결정(`21.4)에 부응하여, 독일 정부는 `30년 온실가스 목표 상향 (`21.5) : `30년 65%, `40년 88%, `45년 탄소 중립

→ `30년 이후에도 석탄발전 운영시, 목표 달성 불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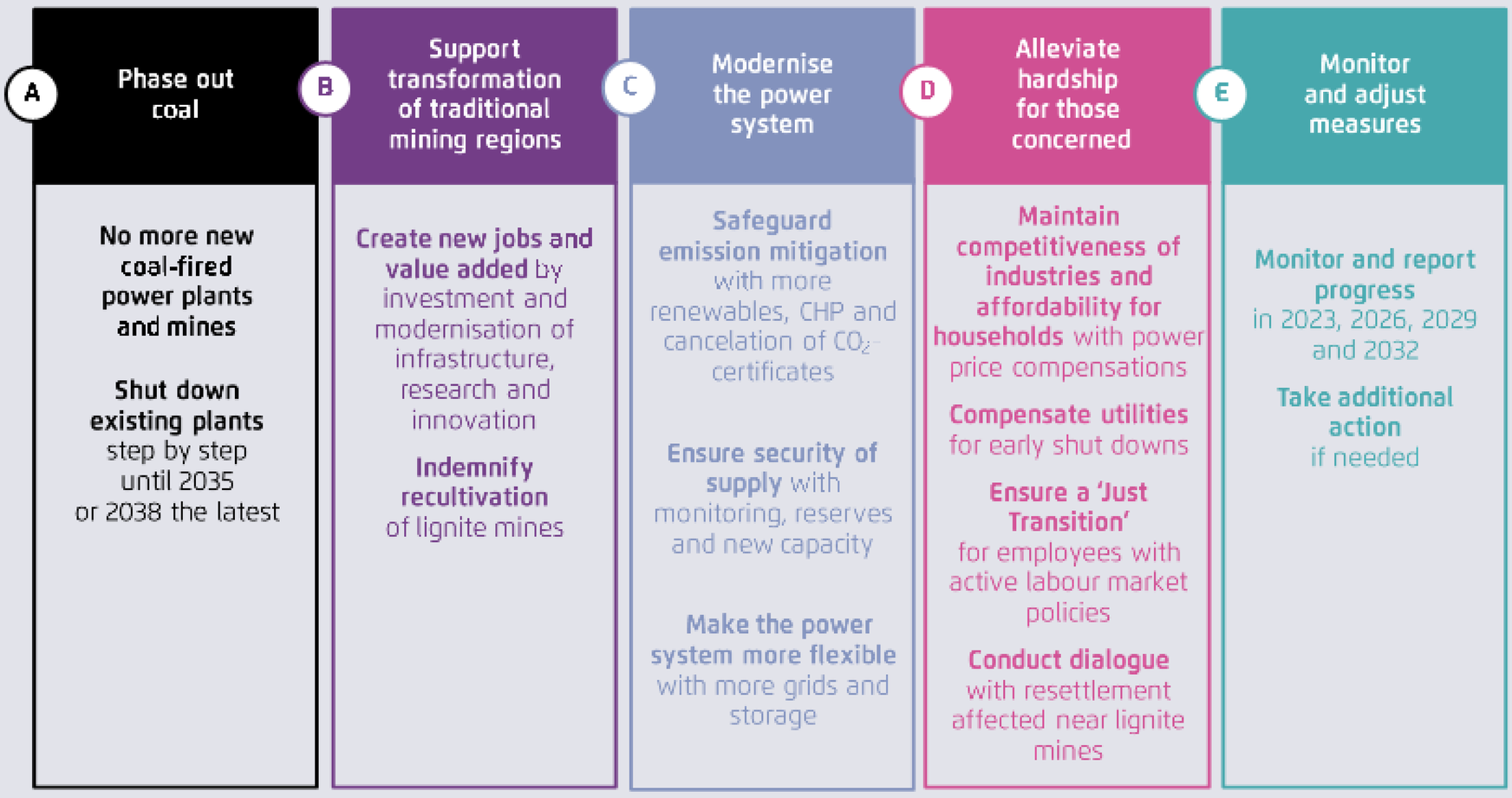
→ 독일 새 정부(`21년 9월 총선)가 세부 계획 마련할 것으로 전망

석탄발전소 폐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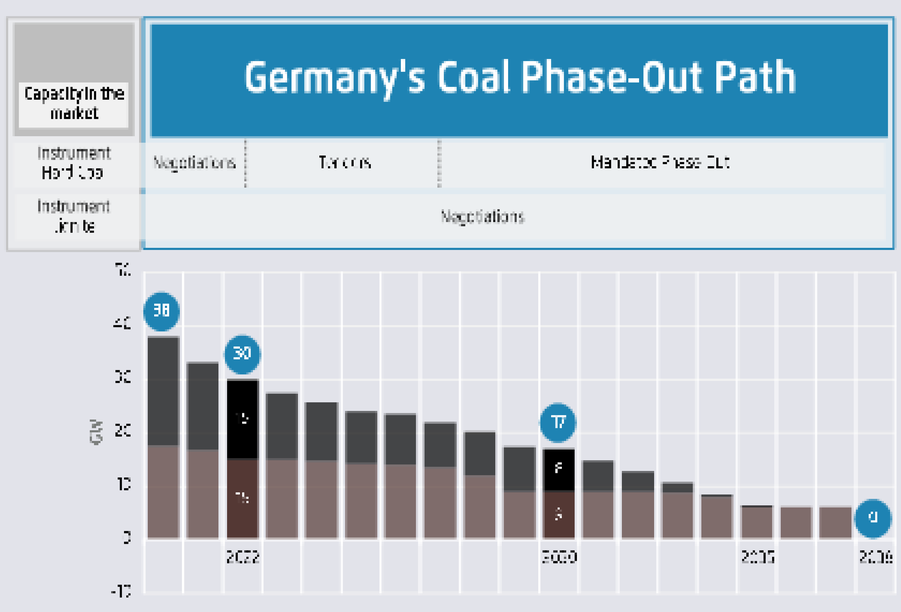
→ 독일 정부 `38년까지 석탄발전 42.6GW(`17년 말 기준) 폐쇄 결정

- ‘석탄위원회’ 구성(`18.6): 광산업계, 전력회사, 학계, 환경단체 등 각계 전문가 28(+3)명으로 구성, 27:1로 최종 보고서 채택(`19년 1월) 및 정부에 제출(`19.2월)
  - 5대 권고 사항: 석탄발전 `38년까지 폐쇄, 탄광지역에 대한 전환 지원, 전력시스템 개선, 애로 완화, 모니터링 및 계획 조정
- 독일 하원 및 상원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및 폐쇄에 관한 법(탈석탄법)’ 및 ‘광산 지역의 구조적 재강화법’ 제정(`20.7)
  - (석탄화력 폐쇄) `38년까지 독일내 모든 석탄화력 발전 폐쇄, 이를 위해 총 400억 유로(약 52조원) 지원* 예정. 가장 오래된 8개의 석탄화력발전은 `20년 이내에 폐쇄 (2조 2항에 `22년, `30년, `38년의 갈탄 및 무연탄 발전용량 명시)

    * 탈석탄 영향에 노출되는 피해 지역들의 경제와 종사 노동자, 기업에 대한 보상금: 석탄화력 운영기업(총 43억 유로), 탄광회사 미브라크(17억 유로), 탄광지역(브란덴부르크,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 작센 등, 총 140억 유로), 갈탄 생산 지역 지원(260억 유로 추가 지원) 등



석탄발전소 폐쇄 로드맵



German Coal Phase Out Law (2021)

→ (갈탄 발전소: 19.9GW) 정부와 갈탄발전 사업자 간 협상

- `30년까지 RWE 소유 6GW 26억€(433€/kW), LEAG 소유 2.8GW 17.5억€(625€/kW) 보상
- `30년 이후 갈탄에 대한 보상 없음

→ (무연탄: 22.7GW) 경매

- `26년까지 경매: `20년 최대 165€/kW, `26년 49€/kW로 하향. `27년 이후 비용 보상 없음
- 제2차 입찰(`21.1월): 총량 1,500MW, 상한가 155€/kW, 최고 낙찰가 59 €/kW, 최저 낙찰가 0 €/kW

탈석탄법 관련 동향

→ 일부 무연탄 사업자의 소송 움직임

- 탈석탄 정책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기 보다는 보상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소송
  - 정부는 사업자의 투자분에 대해서만 보상 가능
- 참고, 독일 에너지기업 REW가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2030 탈석탄 계획에 보상 대책이 빠졌다며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중재 소송 제기(CEW,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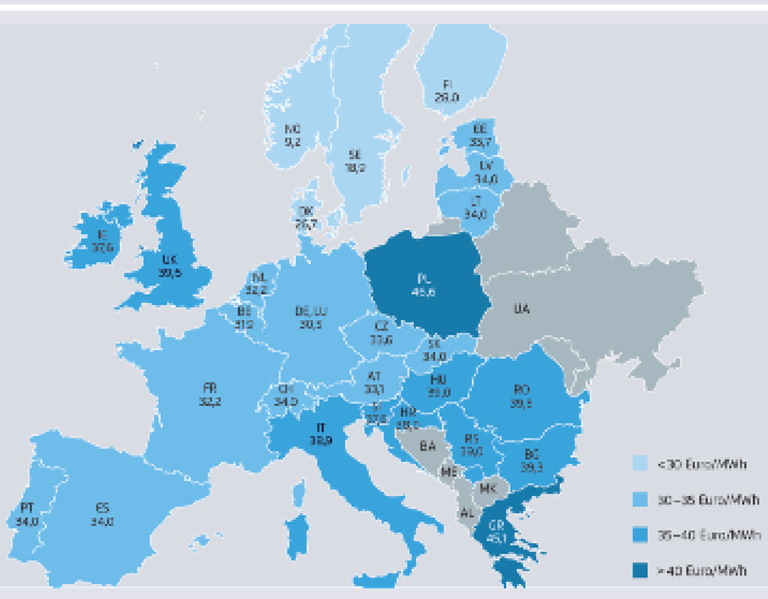
함의

→ 질서있는 에너지전환을 위해 법적 제도화 필요

- 예측 가능성: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미래의 에너지(전력)믹스 구상, 핵폐기물 처분 계획 등
- 국제 기후보호레짐으로부터 한국 경제 보호: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따른 국내 산업의 대유럽 수출 차질, 석탄발전의 좌초자산화 방지 등
- 정의로운 전환: 탈원전/탈석탄에 영향 받는 노동자/기업/지역의 업종 전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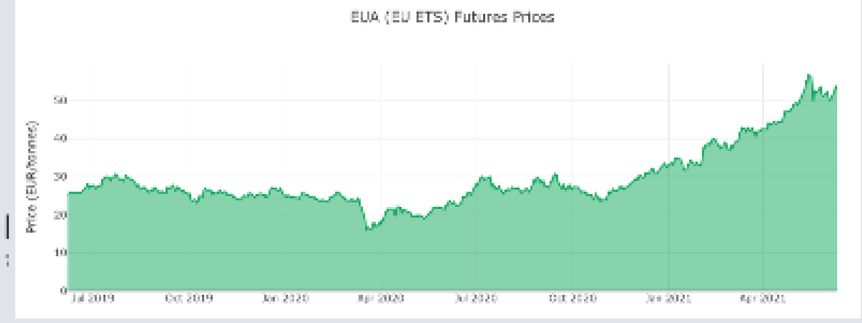
향후 전망 – 점차 줄어드는 '에너지전환의 불확실성'

2020년 유럽 국가별 전력거래소 평균 거래 단가



Agora, 2021b

CO2 가격의 고공 행진 (52.59유로, 6.11)



EMBER, 2021

EU ETS CO_2-price projections, 2020 - 2030

ERCST et al. (2021)

참고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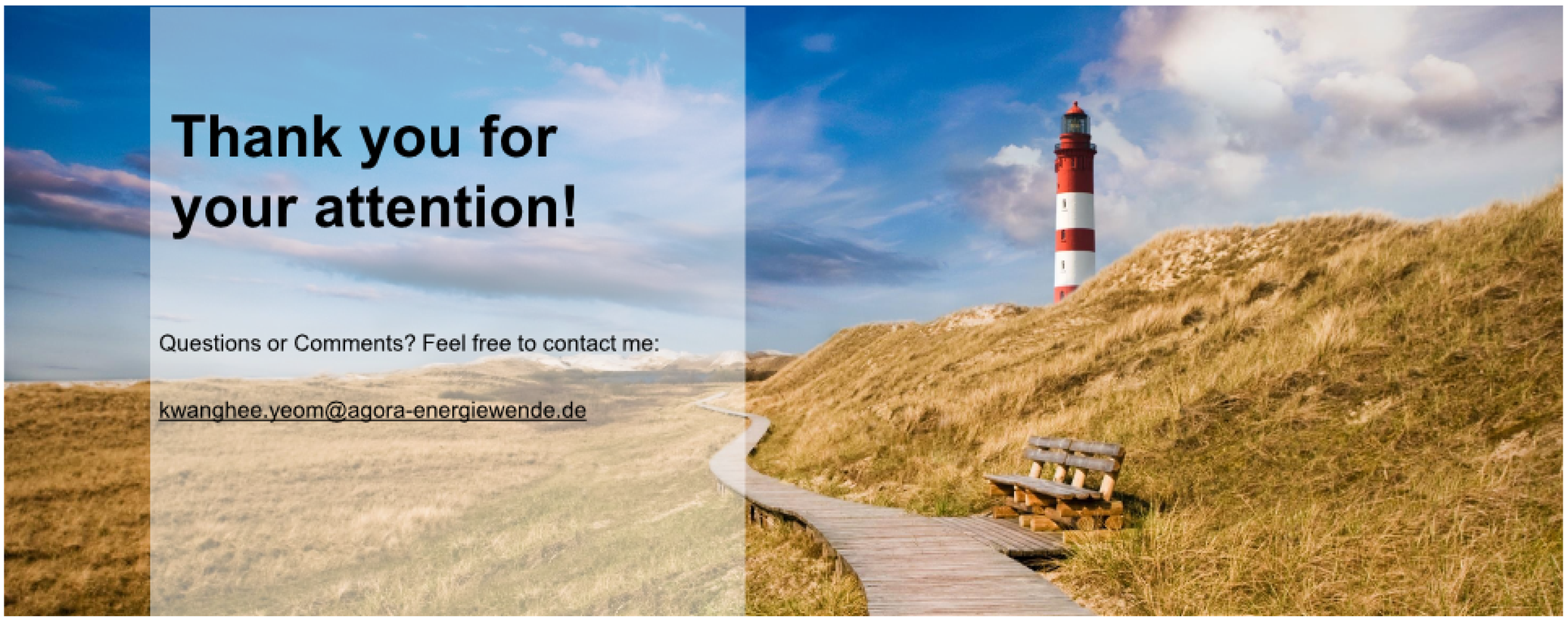
- Agora Energiewende, 2019, The German Coal Commission - A Roadmap for a Just Transition from Coal to Renewables
- Agora Energiewende, 2020, Germany's long goodbye from coal, Status quo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German Coal Commission
- Agora Energiewende, 2021a, 10 Jahre nach Fukushima: Welche Folgen hat der Atomausstieg für die Energiewende? 10 Antworten auf klassische Fragen
- Agora Energiewende, 2021b, Klimaneutrales Deutschland 2045 - Wie Deutschland seine Klimaziele schon vor 2050 erreichen kann
- BfS(Bundesamt für Strahlenschutz), 2003, Umweltradioaktivität und Strahlenbelastung im Jahr 2002
- BUND, 2006, 20 Jahre danach Nie wieder Tschernobyl
- BVerfG, 2016, Urteil des Ersten Senats vom 06. Dezember 2016 - 1 BvR 2821/11 -, Rn. 1-407
- CEW (Clean Energy Wire), 2021, RWE sues Netherlands for two billion euros compensation over the state's 2030 coal exit
- Engels, 2003, "Geschichte und Heimat - Der Widerstand gegen das Kernkraftwerk Wyhl" in Kerstin Kretschmer(Hrsg). Wahrnehmung, Bewusstsein, Identifikation: Umweltprobleme und Umweltschutz als Triebfedern regionaler Entwicklung

Agora Energiewende
Anna-Louisa-Karsch-Str.2
10178 Berlin

T +49 (0)30 700 1435 - 000
F +49 (0)30 700 1435 - 129

www.agora-energiewende.de

Please subscribe to our newsletter via
www.agora-energiewende.de
www.twitter.com/AgoraEW



국내 에너지전환의 주요쟁점 및 현안

선정수 뉴스톱 기자

국내 에너지 전환의 주요쟁점 및 현안

2050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 토론회
<뉴스톱 선정수 팩트체커>

Only Fact
NEWSTOF

차례

01 누구의 위기인가

02 재생e 문제점

03 원전을 향한 애증

차례

04 국민적 합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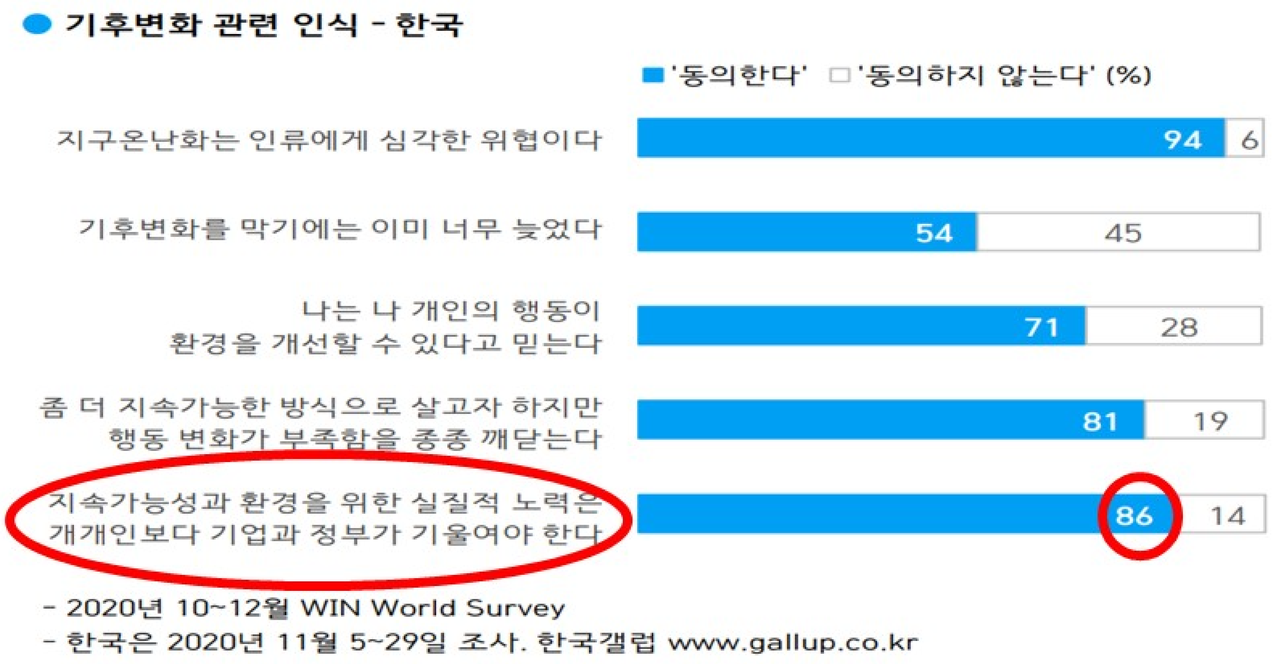
05 정의로운 전환

06 마치며

Only Fact NEWSTOF

1. 누구의 위기인가?

-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가?
- 왜 행동하지 않는가?



2. 재생e 문제점

- 환경파괴 우려

▲ 풍력 발전기 건설을 위해 산 정상이 폭격을 당한듯 초토화되었다. 그런데 풍력으로 산림이 보호된다는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 ⓒ KBS명견만리, 박용훈

최병성 리포트

있다.

▲ 급경사 산지에 자그마한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섰다. 어떻게 가능했을까? ⓒ 신병문 항공사진작가

2. 재생e 문제점

- 충분한 공급은 가능한가? – 펑펑 써도 되는 e?

두산중공업 034020 코스피 2021.06.14 기준(장마감) 실시간 기업개요 투자경고

23,550 전일대비 ▼200 −0.84%

전일 23,750 | 고가 23,900 (상한가 30,850) | 거래량 15,232,522
시가 23,900 | 저가 22,400 (하한가 16,650) | 거래대금 349,639 백만

종합정보 | 시세 | 차트 | 투자자별 매매동향 | 뉴스·공시 | 종목분석 | 종목토론실 | 전자공시 | 공매도현황

종목토론실 공지 미국/유럽 서머타임 적용에 따른 거래시간 변경 안내 토론실 활용 TIP과 운영원칙 안내 글쓰기

날짜	제목	글쓴이	조회	공감	비공감
2021.06.14 14:25	내년에 전기차 쏠아지면 N	hsan****	131	2	1
2021.06.14 04:05	6/13일 폐전기차배터리 글로벌시장규모 … N	wise****	318	3	0
2021.06.12 10:59	전기차,전기항공기시대 개막..!!	mrki****	367	14	0
2021.06.11 18:22	전기차 시대의 최강 에너지회사..!!	mrki****	193	7	0
2021.06.11 14:22	전기차시대 개봉박두..!!! 이게 대세 …	mrki****	139	1	0
2021.06.11 00:38	세계는 친환경 패권 다툼 중… 한국, '…	shin****	437	3	0
2021.06.10 16:34	제네시스, 벤츠 전기차 차례로 출시.. [3]	mrki****	159	2	0
2021.06.10 14:45	주주님들 !앞으로는 전기차를 탑시다..!	mrki****	75	1	0
2021.06.10 11:59	ㄴ [삭제된 게시물의 답글]전기차 [1]	cjsd****	60	0	0
2021.06.10 09:54	점점 전기차 시대가올수록 부각받을거야	mann****	85	1	0
2021.06.10 07:28	전기차 수요에 전력 수요 급증 하는 판에…	cabl****	153	9	1
2021.06.09 20:39	곧 전기차 시대가 도래한다	myde****	156	3	0
2021.06.09 16:39	원자력,전기차 [2]	mun5****	296	9	1
2021.06.09 11:47	고유가, 전기차, 탄소 배출 과련 ,SM… [1]	hido****	135	3	0
2021.06.09 11:44	길에 지나 다니는 전기차.	syjy****	95	1	1
2021.06.09 11:42	길거리 댕기는 전기차 보이지. 답 나왔지	cabl****	88	2	0
2021.06.09 11:31	테슬라>전기차>원전 [2]	syjy****	283	8	1
2021.06.09 11:29	길거리에 전기차 댕기면 댕길수록에 두중이…	cabl****	99	1	1
2021.06.09 11:26	전기차 더 댕기면 댕길수록 두중이는 갈수… [1]	cabl****	175	2	0
2021.06.09 11:24	길거리 댕기는 전기차를 봐라	cabl****	77	0	0

2. 재생e 문제점

Only Fact NEWSTOF

- 주민들은 환영하나?

BUSAN.com 부산일보

‘반대 파고’ 만난 다대포 앞바다 해상풍력 사업

다대1·2동 주민들 집회 개최
“전파 장애·어종 생태계 파괴”

이상배 기자 sangbae@busan.com

입력 : 2021-06-13 19:25:05 수정 : 2021-06-13 19:28:00 게재 : 2021-06-13 19:30:19 (10면)

≡ 한국농정

커버스토리 뉴스 기획 오피니언 사진·만평 농민마당

HOME > 뉴스 > 농산업

농어촌파괴형 에너지, 대책 마련 물꼬 트이나

장수지 기자 | 승인 2021.05.30 18:00 | 댓글 0

산자부, 지난 12일 농어존파괴형 에너지 반대 전국대회 요구에 답변

7월경 관계기관·농민단체·전국연대회의 참여하는 토론회 개최키로

차관 면담 및 사회적 협의기구 “토론회 준비하며 협의 진행할 것”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3. 원전을 향한 애증

Only Fact NEWSTOF

- 기승전 원전

- 정치권: 집권 세력에 대한 반대
- 보수·경제지: 광고주+정권교체기대감
- 핵 교수: 일자리+명예심+신념+신앙
- 핵 노조 : 일자리
- 핵 산업+주주: 경제적 이익

3. 원전을 향한 애증

Only Fact NEWSTOF

- 한-미 해외원전 수주 협력
- 여당 대표 SMR 예찬론
- 파기된 대선 공약(원전 진흥책 폐지)
- 핵무장 가능성?
- 정권교체시 1순위로 엎어질 정책?

朝鮮日報

정치 >

文면전서 원전 꺼낸 송영길… 여권 '탈원전 반대' 봇물 터지나

소형 원전 필요성 언급
정세균도 과거 원전에 긍정적 입장
이광재도 소형 원전에 관심 보여

이동훈 기자
입력 2021.05.23 05:40

지난 5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초청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왼쪽)와 문재인 대통령. photo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5선) 체제 출범 후 문재인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강행할 뜻을 내비쳤던 장

4. 국민적 합의

Only Fact NEWSTOF

- 에너지전환 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 필요
- 정당성 획득

한국경제

최재형 소신발언 "대통령 공약, 수단과 방법 안가리고 정당화되나"

김수현 입력 2021. 02. 23. 10:05 댓글 0개

"공무원 행정행위도 법 잣대에 맞아야"
"감사는 정책 자체 아닌 정책 수행시 적법성 보는 것"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

5. 정의로운 전환

- 도태되는 산업과 일자리
- 지역 경제 위축
- 누가 대가를 치러야 하나?
- 명예롭게 떠날 수 있게...

6. 마치며

- 당위성보다는 자발성과 참여
- 정부와 기업이 해야할 일
- 내가 주도하고 변화시켜야 할 일
- 국민들의 심각성 인식을 동력으로
- 이런 재난 대처가 세상에 있나?

NEWSTOF

Only Fact!!

지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에너지전환

성원기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 화상토론회 토론문

-지역주민 입장에서 바라본 에너지전환

삼척석탄화력반투위 공동대표 성원기

이 시대는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위기와 핵발전으로 인한 핵사고의 방사능 위험으로 인하여 지구상 온 생명이 위험에 처한 비상시기이다.
특별히 이산화탄소 과다배출로 인한 지구온도 상승으로 인한 기후위기의 문제는 당장 실질적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전세계인 모두의 생존이 달린 현실의 문제가 되었다.
석탄화력발전소는 최대의 이산화탄소 배출원으로 석탄화력을 끄지 않고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이와같이 석탄화력발전소를 당연히 꺼야하는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신규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새로 짓고 있으니 반생명적인 무책임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그런데 신규로 짓고 있는 석탄화력은 7기중 6기가 이명박정부에서 발전사업허가권을 민간기업까지 확대한 정책에 따라 민간기업인 SK 고성석탄화력 2기, 삼성 강릉안인석탄화력 2기, 포스코 삼척석탄화력 2기인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탈석탄을 공약으로 출범하였다. 민간기업이 아닌 공기업에서 공사를 하였다면 적어도 강릉안인과 삼척석탄화력은 백지화 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도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으며 그 실행을 위하여 정부 여당도 공사비를 물어주고 민자석탄화력을 중단시키기 위하여 근거법인 에너지전환지원법을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이 대표 입법발의하게 된 것이다.
삼척은 이미 시내가 총 1.6GW의 동해 GS석탄화력과 북평석탄화력의 5km이내 직접 영향권에 있으며 삼척 삼표시멘트 분진이 중첩되어 미세먼지가 건강권을 위협하는 지역이다.
여기에 현재 건설하고 있는 2.1GW 석탄화력발전소의 반경 5km이내에 삼척시청과 시내 대부분이 포함되어 석탄화력이 가동에 들어갈 경우 실제적으로 삼척시내는 주민이 건강권 뿐만 아니라 생명권이 위협받게 된다.
또한, 석탄하역을 위한 항만공사로 국민휴양지인 맹방해변은 이미 초토화되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사비를 물어주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것 만이 유일한 해결의 길이다.

그런데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를 삼척동해태백정선지역구 국민의 힘 산자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이 반대하고 있다.
삼척시민 60%가 삼척석탄화력 건설 반대이다.
유권자의 엄중한 명령이다.
이철규 의원은 에너지전환지원법 통과에 앞장서라.
그리하여 석탄화력 중단의 길을 열어라.
그것이 삼척을 살리고 우리나라를 살리고 지구를 살리는 길이다.

청년이 바라보는 기후위기와 탈석탄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청년이 바라보는 기후위기와 탈석탄

윤민지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

청년과 기후위기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찜통지구'라는 되돌아 갈 수 없는 지점으로 치달아가고 있다. 문명을 가능하게 한 지구의 생태적 조화와 회복력이 치명적인 위기에 있다. 지구 평균기온 상승이라는 현상과 함께 바다, 빙하, 육지 등 행성의 곳곳에서 발동되는 기제들은 생명의 원천인 물에 대해 우리가 기대해 온 모습을 전혀 다르게 바꿔놓을 것이다. 먹거리를 생산하기 기대한 생태적 기반은 붕괴될 것이고, 매번 새로운 모습의 재난을 망연히 마주해야 한다. 값을 치르게 할 뿐 우리의 유일한 거처인 지구와 그 생태계는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우리의 사회경제체제가 관성을 가진 것처럼 지난 수십년간 배출해 온 온실가스의 영향은 더 엄중하게 이 시대에 펼쳐지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절벽 앞에서 어떻게든 급제동을 걸어야 한다. 가깝게는 10월 NDC 상향을 위해서 우리나라 최대 온실가스 배출원인 석탄발전소 폐쇄하는 방안이 시급하다.

20대인 우리가 2030년에 30대, 2050년도에는 50대의 평범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떤 현실을 마주하게 될까? 농산물 생산이 불안정해짐에 따라 등장한 가령 '파테크'라는 말은 정말 아찔하다. 지금 여기 우리는 시간이 더 가버리기 전에, 도래할 세대들에 막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닌 여기서 당장 보다 안전한 미래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탈석탄은 기후위기 시대에서 보다 안전한 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기초이자 선결과제

1)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것들이 있다. 재생가능에너지 확산과 그 전환 과정은 정의로울 것이며 기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하고 또한 에너지 효율 제고 및 에너지체계의 변화와 동시에 에너지 소비량과 소비방식이 결부된 삶의 양식에 대한 변화도 촉구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탈석탄, 탈원전을

위한 노력은 시작이자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에너지전환지원법에서 아쉬운 한 가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제1조에서 법의 목적으로 "에너지전환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발전사업자 및 관련 지역·산업에 대한 지원 등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제2조에서 '에너지전환'을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위하여 정부가 「전기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 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수립된 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하여 원자력발전 및 석탄화력발전 등에 의한 전력공급의 단계적 축소, 신·재생에너지발전에 의한 전력공급 확대 및 수요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또는 그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여전히 그 전환이 정의롭게 하기 위한 조건들, 주체,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다. 기후위기가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일컬어 지는 데에는 그 영향이 기존의 불평등의 골을 따라 차별적으로 닥치기 때문이다. 우리에겐 단지 기술적으로 에너지원이 친환경적으로 대체될 뿐인 그런 에너지 전환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2) 지원에 대하여 심의하고 의결하는 거버넌스에 있어서 주요 주체로서 지역사회와 노동자를 포함해야 한다. 제3조, 제4조, 제5조, 제17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너지전환지원위원회, 비용심사전문위원회, 조정위원회의 인사 요건에서 지역주민 및 노동계의 참여는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지역을 법안의 지원이 명백히 지역성을 띠고 있음에도 지역의 주요 주체가 거버넌스에서 주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 12조에서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에너지전환 대상 지역에 주민복지지원사업 또는 기업유치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역은 지원대상인 동시에 지원에 대한 내용을 구성할 수 있는 주체로 자리매김되어야 한다. 지역에 대한 지원 역시 지역사회 공동화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고 지역공동체의 질적 발전을 위한 방안이 주민복지지원사업과 기업유치로 일축될 수는 없다. 이해관계자를 정책결정과정에 적극적으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정책 수용성을 제고하며, 특히 너른 협의를 통해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일반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 전문가주의와 관료주의를 기반으로 한 법제도의 관리와 운영이 지금껏 우리 사회에서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참여에 대한 욕구와 더불어 숱한 갈등을 빚어온 점을 명심해야 한다.

3) 제10조 '지정등의 철회' 조항은 단호하게 고수되어야 한다.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함으로서 위헌소지가 있다는 주장 역시 있고 이는 기존 시스템에서 충분히 관철 가능하다. 그러나 일말의 이윤과 경제성이라는 판단 하에 추진되어온 산업의 관성을 고려할 때 지정철회 조항 없이 산업 지원을 통한 자발적 폐쇄 만을 기대해서는 기후위기가 촉구하는 속도에 발맞출 수 없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 35조에서 환경권을 명시하고 있다. 기존에 신성하게 여겨오며 숱하게 양보해온 파괴적인 신념과 모두의 생명이 경합하는 가치판단의 장이라고 사료된다.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는 응당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더불어 기존 온실가스 다배출 산업이 대기중에 사실상 무단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해 오며 누려온 혜택과 역사적 책임에 대한 비단 이 법안에서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물어야 할 역사적인 책임을 위한 법도 함께 마련되어야 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탈석탄의 속도를 늦추는 일련의 선택들은 역설적으로 산업과 우리 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결정일 수 있다. 탄소중립을 숨가쁘게 구체화해가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 가운데 좌초자산으로 분류되는 화석연료 산업은 속히 전환되어야 한다. 소형원자로같은 환상에 대한 얘기를 할 때가 아니다. 신속한 전환에는 기술적 구원이 아닌 민주적으로 전환과정과 참여를 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지금도 부족해서 국제적으로 목표 상향을 독촉받는 상황에서 보다 장기적으로 건강한 산업과 경제를 도모하고자 한다면 자가당착적인 판단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는 결연하게 행동해야 한다.

4)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하나의 중요한 조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 길목에 자리잡은 애로사항은 석탄 뿐만이 아니다. 가교로 여겨지지만 여전히 또 다른 종류의 화석연료인 LNG에 대해서도 보다 냉정한 판단 필요하며 폐기물 소각으로 발생하는 에너지까지 포함된 '신'재생에너지라는 기만 등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 보다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에 대한 상상력을 저해하는 현실적인 조건들을 톺아나가야 한다.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온실가스 집약적인 에너지에 기반하지 않은 노동과 일상을 원한다. 또한 전환과정에서 젠더, 기존 노동시장의 차별적 조건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보다 전환적이고 입체적인 지원방안

설계 필요하다.

5) 끝으로, 앞서 비판한 지점들과 더불어 에너지전환지원법안 마련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있었는지, 만일 부족했다면 신규 석탄, 핵 발전 폐쇄에 대한 보상과 지원의 근거 마련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 급히 처리한 과정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인지, 궁극적으로 에너지전환지원법은 정말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지원하는 법인지 역시 질문하고 싶다.

노동배제 없는 정의로운 전환

송명나 남부발전노조위원장

정의로운 에너지전환 정책, 노동의 참여와 공공성

한국남부발전노동조합 위원장 송 민

1 노동이 참여하는 에너지전환 사회적 대화

□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에너지전환이 화석연료기반 발전산업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독일의 '탈석탄위원회'와 같은 **국가적 수준에서 관련 이해관계자(노동조합 포함)들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

- 단순히 석탄발전소 폐쇄에 따른 경제적 손실 보상을 추구하는데 국한되지 않고,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으로 의제를 확장하여 이해관계자가 탈탄소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하고 이행과정을 공동관리.

- 석탄발전소 폐쇄의 속도, 관련 보상 유무와 방법, 영향받는 이해관계자(노동자 및 지역주민 등)의 지원 방법과 규모, 그리고 에너지전환의 전략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계획)** 정부는 향후 10년 내 석탄발전소의 36%인 22기를 폐쇄하기로 결정함. 이미 서천1·2호기를 비롯하여 3개 호기가 폐쇄 완료 하고, 2022년 까지 경남의 삼천포 1·2호기, 전남의 호남 1·2호기, 충남의 보령 1·2호기 등 총 6기를 조기에 폐쇄할 예정.

○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감소 일자리 추정)**

2021년 폐쇄예정 석탄발전소 사례조사 결과(*oo화력 : 250MWx2기)

직접운영	oo발전	190명
협력업체	경상정비	74명
	연료환경	49명
	청소·경비	34명
	대정비공사 인력	200명
합계		547명

<oo화력 폐지에 따른 예상 일자리 감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ㅇㅇ석탄화력 (50만KW)의 경우 폐지 시 직접운영 200명, 협력업체 350명, 합계 직접고용 550명의 일자리 감소함. 이를 기준으로 50만

KW 6기를 폐쇄할 경우 감소되는 직접고용 일자리는 3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 만일 10년 내 20기 조기폐쇄 시 직접운영 4,000명, 협력업체 7,000명, 합계 직접고용 11,000명의 일자리 감소 예상.

이 수치는 직접고용 대상만을 고려한 것으로 고용 유발, 취업 유발 효과를 적용한 간접고용 인원은 제외한 수치. 간접고용인원을 포함한다면 감소 되는 일자리는 훨씬 늘어나게 될 것.

정부통계에 의하면 재생에너지로 늘어나는 일자리는 2025년까지 10,000개, 2030년까지 1만3천개로 추정. 탈석탄으로 감소되는 일자리와 재생에너지 확대로 늘어나는 일자리 수치가 거의 동일. 재생에너지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하지만 전통에너지 분야에서 줄어드는 일자리를 감안해야.

○ **(LNG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LNG발전 설비 구조가 석탄발전보다 단순하기 때문에, LNG발전소의 인력 수요는 석탄발전의 절반 정도에 불과. 대략 1GW용량으로 환산 시 표준석탄발전소에는 714명, LNG 발전소에는 235명의 인력(협력사 포함)이 근무.

위 추정을 보다시피, 석탄화력발전은 직접고용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효과가 큰 산업. 석탄화력 조기 폐지 시 일자리문제 등 연관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사회적 비용이 함께 고려되어야.

○ **(독일의 사회적 대화)** 에너지전환의 모델로 여겨지는 독일의 경우 탈원전·탈석탄으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참여한 사회적 대화를 해 왔고, 이를 통해 국가차원의 직무전환, 재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속도 조절 등이 이루어지고 있음

○ **(탈석탄위원회, coal exit commision)** 석탄발전을 줄이는 등 탈석탄 정책에 대해 독일정부는 2018년 7월에 '성장, 구조변화 및 고용에 관한 위원회(일명 탈석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에 붙인 결과 2038년까지 석탄 발전ZERO 권고안을 받음. 탈석탄에 반대하는 주에서도 참여했으며 탈석탄에 따라 피해를 입는 기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책이 포함.

○ **(탈석탄위원회에 노동조합 참여보장)** 탈석탄위원회를 중심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 합의가 가능했던 이유는 탈석탄위원회의 구성이 구체적인 이해당사자와 책임 있는 대변자와 실행 주체들이 참여하여 효율적인 논의와 결과의 실효성을 담

보한 것. 위원회에는 연방정부 부처 대표, 석탄산지 주정부 대표, 정당대표, 사회과학자와 시민단체 대표, 환경단체, 경영자 조직, 에너지 회사를 비롯하여 노동조합에서는 DGB(독일노총), Ver.di(공공노조), IGBCE(독일 광산·화학·에너지산업 노조)가 참여.

○ **(독일노조 인터뷰)** 독일 최대노조, 베르디의 에너지산업 대표와 인터뷰를 보면
"정부가 일자리를 보장해 준다고 했다.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고 사회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
"탈석탄화를 진행할 때와 진행하지 않을 때 노동자의 삶의 질의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이다."
"8개 원전 조기 폐쇄한 것에 대한 정부 배상이 결정되었다. 관련 위원회가 있었고 베르디 노조도 참여했다. 노동자 유지조건이 조약에 포함되어 있었다. 보상 측면이 있었다. 이 위원회에는 연방정부, 회사, 원전노조 대표 등이 참여했다."

○ **(독일 노조 수용성이 높은 이유)** 에너지산업 관련 노조는 탈핵과 탈석탄 논의 기구에 참여해서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재원 마련과 고정임금제도 등 에너지전환에도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유지 시키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당 부분 관철이 되고 있어서 최근 들어 에너지전환에 대한 노동자들의 반발은 없는 편임.

○ **(독일 에너지 노조의 갈등해결 과정의 시사점)** 정부가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위원회를 통해, 관련 노동자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겸비한 노동조합이 참여하였으며, 이를 이해관계자들이 함께 공유하며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 나간 점.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실직와 전직의 문제는 명백하였으나, 이들에게 직무전환과 새로운 일자리로의 전직 프로그램을 국가차원에서 수립하였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노동조합대표가 끊임없이 대화하고 협상하였음.

○ **(한국형 탈석탄위원회)** 독일은 '탈석탄위원회'에 관련노조를 참여하게 하고 대화와 협의로 갈등을 해결하여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이룰 수 있었음. 우리도 에너지전환에 따른 전력산업의 구조변화가 소속 노동자의 해고와 노동조건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에너지전환 사회적 협의기구'에 관련 노동조합대표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

2 에너지공공성 기반의 에너지전환 정책

□ 에너지전환 과정에서 전력산업의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생에너지확대에 발전공기업의 주도적 역할을 보장**.

- 발전공기업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추진할 능력이 있으면서 민간 대기업처럼 이윤극대화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전환이 과도한 이윤추구로 흐르는 것을 막을 수 있음. 재생에너지 사업에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도록 공기업의 적극적이고 선도적인 역할 부여

□ 탈탄소사회로의 에너지전환 시대에 전력공급 시설의 소유·운영구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새로운 에너지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적합한 전력산업구조 논의가 절실한 시점

- 현재 경쟁체제의 5개 화력발전공기업, 1개 원자력발전공기업의 전력산업구조는 민영화와 효율성이 최우선의 가치로 대두되던 신자유주의 산물. 에너지전환과 사회적가치가 우선시 되는 현재에 부적합. 오히려 현재의 분할된 구조는 과다경쟁 등 전환을 더디게 하는 장애물이 되고 있음. '5개 화력발전 공기업 통합' 및 '한국전력과의 수직통합' 등 **분할된 전력산업구조를 통합해, 에너지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공공성과 에너지전환)** 「전력산업구조개편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전력산업구조개편이 추진된지 올해로 20년. 90년대 말부터 추진된 전력산업구조개편은 사실상의 에너지산업 민영화 정책. 이후에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회적인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고 이미 화력발전 설비용량의 25%가 민간 발전회사 소유. 시간이 흘러 지금 에너지정책의 화두는 에너지전환임. 성공적인 에너지전환을 위해 '시장활용 에너지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지만,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공공성'은 대립이 아님. 오히려 '공공성'이 보장되어야 정의로운 전환. '에너지전환'과 '에너지 공공성'은 동시에 추구되어야 할 전략

○ **(영국의 재공영화 주장)** 영국의 노동당은 "에너지 전환의 첫 걸음이 사유화된 전력산업을 다시 공유화하는 것"이라고 못 박으며, 전력산업 민영화의 元祖나라에서 '전력산업의 재공유화'가 쟁점이 되고 있음. 영국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은 공공부문을 재공유화하는 <We own it> 캠페인을 2013년부터 시작하였고, 이에 호응하여 노동당 대표 였던 제레미 코빈은 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재공영화 정책을 발표하였음.

영국 에너지시스템의 재공유화를 구상을 제시하고 있는 David Hall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음.

“새로운 공적 시스템은 재생에너지 개발을 포함한 새로운 목표를 가져야만 하며, 20세기 국유화 산업과 관련된 시민/소비자의 괴리감과 무책임성을 피해야만 한다. 새로운 구조는 지역적 조건과 수요에 보다 잘 반응하고 그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지역적 수준의 공적 소유를 추구할 것이다”

○ **(지속가능한 전력산업구조개편 모색 필요)** 전력산업 구조개편 판단의 기준은 공급안정성 / 공공성 / 지속가능성(환경성) / 효율성을 들 수 있음.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전환 시대에 적합한 발전공기업의 거버넌스를 새롭게 모색해 보아야 할 때. 공공 사회재는 공적 통제 아래에서 생산하고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 임.

2050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지원법화상 토론회

더불어민주당